

일본 강진...1명 사망 150여명 부상

노토지방 규모 6.9...항공기·열차 운행 일시 중단 남태평양 바누아투 섬 인근에서도 잇따라 지진

25일 오전 9시 42분께 일본 중부 북쪽 해안 지역인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공항 활주도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노토와 가가 지역 해안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날 낮 10시 18분께 이시카와현 스즈시와 가나자와항에서는 높이 10c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쓰나미 주의보는 이날 낮 11시 30분께 해제됐다.

기상청은 당초 규모를 7.1로 발표했다가 이날 오후 6.9로 수정 발표했다. 진원지도 노토반도 앞 해저 50km에서 해저 11km로 바로잡았다.

이날 지진은 노토와 인근 나나오시, 와지마시, 아나미즈마치, 시가마치 등은 물론 인근 지역인 니가타현, 토야마현에서도 감지됐다. 노토 지방에서는 규모 4 안팎의 여진이 50회 이상 발생했다.

이시카와현 경찰에 따르면 이날 지진으로 와지마시에 사는 미야코시 키요미(여·52)씨가 자택 정원에



일본 중부 해안지역 지진 발생
25일 오전 9시 42분께 진도 7.1 지진 발생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지역 유료도로 부스 근처의 도로 지반이 지진으로 내려앉았다. 이번 지진은 12년 전 한신대지진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40분(한국 시간) 남태평양 바누아투 섬 인근에서도 규모 7.3과 7.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바누아투 경찰은 지진으로 인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 석등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NHK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국에서 적어도 1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상자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토공항관리사무소는 공항의 활주도와 유도도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 공항을 폐쇄했다.

또 호쿠리쿠전력은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시가마치에서 수백가구가 정전됐다고 밝혔다.

이시카와현과 토야마현에서는 JR의 모든 철도 노선이 일시 운행 중단됐다. 토야마현에서는 일부 도로가 무너져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또 이날 오전 9시

진앙지 수심 170m 불과 '해일' 조건 충족 못해

■ 한반도에 지진해일 피해 없었던 이유

25일 오전 9시42분 일본 중부 북쪽 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에 0.5m 높이의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진해일 피해가 전혀 없었다.

지진해일이란 해저 지진이나 해저 화산분화, 산사태, 해저 핵실험 등 기상 이외의 요인에 의해 해저가 융기하거나 침강, 해수면이 변화하면

서 발생한 파, 바다에서의 파는 주기가 1초 이하의 것에서부터 24시간 이상의 것까지 여러 종류의 파군이 있으나 지진해일은 그 중 수분에서 1~2시간에 걸친 파를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지진의 진원지가 일본 노토반도 앞 해상이었다는 등의 일본 기상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동해안 및 남해안에 0.5m 이하의 파고 가능성이 있다는 지진해일 정보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진해일 영향이 전무했던 것은 일단 무엇보다 지진 진앙지의 수심이 170m로 너무 얕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진 해일이 발생하려면 지진규모가 일단 크고 진앙지 수심이 1k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지진 규모가 6.9였으나 수심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제 위안부 범죄에 대해 과거 입장으로부터 후퇴한 것은 주요 민주국가 지도자로서의 수치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4일(현지시간) 강력히 비판했다.

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의 짝 소리(Shizo Abe's Double Talk)'란 사설을 통해 그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열성적이면서 일본이 저지른 위안부 전쟁 범죄에 대해선 모른 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이중성은 지도자의 수치"

WP "납북자 열 올리며 위안부 범죄 눈 감아" 비판

아베 총리는 미 의회가 추진 중인 위안부 사과 촉구 결의안과 관련, 일본인이 전시 여성 납치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는 없다는 입장을 이번 주에 두 차례나 밝혔으며, 일본 정부도 위안부 만행을 시인한 1993년 고

노 요혜이 담화에서 후퇴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납북자 사건의 증거보다도 더욱 뚜렷하며, 역사가들은 20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성노예로 끌려갔고 일본 병사들이 납치에 가담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쟁점화해 지지를 높이는데 활용했지만, 2차 대전 당시 수십 만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납치, 강간, 성노예화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괴상하고 무례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비난했다.

EU 50주년 '베를린 선언문' 발표

사회 모델·단일시장·유로화 등 성과 지적 헌법 부활 등 쟁점 언급 피해 분열상 노출

유럽통합의 시발점이 된 로마조약 체결 50주년 기념일인 25일 유럽연합(EU)은 베를린에서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장래의 목표를 제시하는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통합 50돌을 자축하기 위한 '베를린 선언문'은 EU의 과거 역사와 중심적 가치, 그리고 미래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대 쟁점 현안인 EU 헌법 부활과 추가 확장, 종교적 전통에 관한 문구는 아예 빠져 있어 미래의 도

전과제를 놓고 분열중인 EU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간의 조율과정에서 폴란드는 기독교 전통을 언급할 것을 요구했고, 자국 통화 파운드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는 영국은 유로화 언급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최대 쟁점인 EU 헌법 부활문제를 놓고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체코, 폴란드, 영국이 EU 헌법이란 용어 자체가 언급되는데 반대했다.

급기야 EU 순회외장국으로 이번

선언문 작성의 책임을 맡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통합에 나서지만, 선언문에 의장국인 메르켈 총리와 한스-게르트 피터링 유럽의회 의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등 3명만 서명하고 나머지 26개 회원국 정상들의 서명은 받지 못했다. 정상들의 서명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문은 27개 회원국 모두의 지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민감한 현안은 은유 또는 우회적 표현 방식을 택했다.

이번 50주년 행사에 가입 후보국인 터키와 발칸 국가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도 회원국 내부의 입장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안보리 회원국들이 24일 유엔에서 이란이 핵프로그램 제기를 거부함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이란 추가 제재 결의

자산동결 대상 28곳 추가...이란 "핵 활동 계속" 거부 이란혁명수비대, 7천 해군 15명 억류...양국 긴장 고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유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23일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을 가르는 수로 상에서 밀수를 감시하는 상선 검색활동을 하던 영국해군 병사 15명을 붙잡아 억류해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작년 12월 결의에 이어 채택한 이번 결의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계된 개인, 단체, 기관 28곳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시켰다.

결의는 또한 결의 채택 후 60일 안에 이란이 유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자의 여행 ▲대(對) 이란 무기판매 ▲이란 정부에

대한 신규 금융원조의 대출 등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안보리의 추가제재 결의를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핵 활동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거부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영국 국방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이라크 영해에서 일삼는 상선 검색을 마친 영국군 15명이 이란 해군 함정에 포위돼 이란 해역으로 끌려갔다"며 "영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즉각적이며 안전한 귀환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美 하원, 철군 조건 전비법안 통과

부시, 즉각 "거부권" 재천명

미국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3일 하원에서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대부분을

철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전비법안을 통과시키자, 부시 대통령이 즉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는 등 이라크전 개전 4년여 만에 의회와 백악간에 가장 첨예한 대치 상태가 빚어졌다.

민주당은 전비법안에 철군 시한을 두는 것이 자칫 이라크 파견 미군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당내 반대를 해소하고 1천240억 달러 규모의 전비 법안을 218대 212로 통과시켰으로써 추가 파병을 계획중인 부시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주)한국에텍 '07년도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선정 740kw 확정

신재생에너지 정부 무상 보급보조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난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효율: 17% 100% 무상 보급 10년 보증 147㎡ (220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효율: 50% 100% 무상 보급 10년 보증 147㎡ (220kw)

태양광·태양열시스템 무상 보급보조사업	원수 및 신청방법
<p>신청대상: 주택용</p> <p>신청기간: 2007.03.26 ~ 04.30</p> <p>신청처: 한국에텍</p>	<p>주식회사 한국에텍</p> <p>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p> <p>전화: 02-557-1111</p> <p>홈페이지: www.ketec.com</p>